



주간통일정세 2010-11(2010.03.08~03.1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1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 中 동북지방에 해외반탐요원 증파(3/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작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동북 지방에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해외반탐(방첩)요원을 대폭 증파
- 北, 김정은 초상화 배포 준비(3/13, RENK)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초상화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고 일본에 있는 대북인권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대표 이영화)가 13일 밝힘.
 - 이는 이달 초부터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시로 준비되었으며,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조만간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평양에 '김정은 상징' 선전화 등장?(3/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외국인으로부터 평양 사진 3장을 제공받음. 사진 속에 등장한 선전포스터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되는 소재들이 담겨 주목됨.

■ 김정일동향

- 3/ 8 김일성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3/9, 중방)
- 3/11 김정일, 희천시내(자강도) 공장들 현지지도(3/11, 중통)
 - 칠성전기공장, 희천도자기공장,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금수골혁명사적지 방문
 - 박도춘(자강도당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당부장), 주규창·리제강·리재일(당 제1부부장) 등 동행
- 3/11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은종석과 노병철인 김윤식·이춘기에게 생일상 전달 (3/11, 중방)
- 3/13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3/13, 중통)
 - 유기농법 강조,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경희.장성택 당 부장, 리제강.리재일 당 제1부부장이 동행



■ 기타동향 (대내 정치)

- 국제부녀절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에서 진행(3/8, 중방)
- 김영남, 김중린(당비서), 박명선(내각부총리), 노성실(여맹위원장) 등 참가
- 김영남, 駐北 中國 신임대사 '류홍재'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3/8, 중방)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3.11 만수대의사당에서 노르웨이 적십자사 대표단과 담화(3/11, 중통)
- 駐北 쿠바대사관, 외교관계설정 50돌 즈음 상품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진행(3/11, 중통)
- 러시아 차이코프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대표단, 평양도착(3/11, 중통)
- 예성강 청년 2호발전소, 4호 물길굴 완공(3/12, 중방)
- 전 북한 정보기관원 김정률 씨 전화인터뷰(3/13, 연합뉴스)
- 오스트리아에서 20년간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활동, 하루 5천400원으로 생활 등

나. 경제 관련

- 北, 라선 완전 개방설(3/8, 산케이)
 - 북한이 동북부 교역도시인 라선시를 외국 기업에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
 -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이 라선의 조선노동당 간부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은 이달 라선을 방문, "6개월 후에 이곳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선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 부장은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지목되는 인물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자유무역지대 지정 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라선시를 시찰한 뒤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
- 중, 北라진항 10년 사용권 얻어(3/8,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이 10년간 북한 라진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
 - 리룡시(李龍熙)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부서기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로써 지린성의 대외물류 길이 열렸다고 밝힘.
 - 중국은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라진항을 자국의 낙후된 동북 3성이 태평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경제전략적 요충지로 주목해 옴.
 - 러시아도 라진항이 북·중 간에 국제물류기지로 개발되면 사할린과



시베리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라진항으로 보내 주변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대풍국제그룹의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측이 두만강 개발계획을 축으로 국제투자를 유치할 복안을 갖고 있다”며 “차후 라선특별시와 청진항을 잇는 일대가 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동북아물류, 교역의 중심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힘.
- 中, 신압록강 대교 10월 착공 확인(3/8, 연합뉴스)
 -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자오렌성(趙連生) 단둥시장은 7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잇는 신 압록강 대교가 오는 10월 착공된다”고 밝히며, “신 압록강 대교를 3년안에 완공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
 - 중국은 작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시 북한 측과 압록강 대교 건설이 포함된 양측간 경제기술 합작 협정서를 체결했음.
 -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루 차오 연구원은 신 압록강 대교는 기존의 압록강 대교에서 하류로 10km떨어진 곳에 건설되며 동변다오(東邊道)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될 것이며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을 잇는 철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中·러에 라진항 개방(3/8,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에 라진항을 10년간 추가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이어 이어 러시아에도 신규로 50년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
 - 실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라진-하산 철도복원과 라진항 개선에 합의하고 같은 해 말 1억4천만 유로를 출자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北, 담배 재수출로 달러벌이(3/9,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
 - 북한은 영국의 담배 제조업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로부터 수입한 담배를 지난해 2월 재수출하기 시작해 온 것으로 확인
 - BAT가 북한에 판매한 담배는 ‘스테이트 익스프레스 555’로, 싱가포르에서 북한 국내용인 ‘NK 555’로 포장돼 북한 남포항까지 운송된 것으로 확인
 - F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 가운데 최소 1만5천갑(630만달러 상당)이 남포항을 다시 빠져나와 베트남과 필리핀의 항구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
- 北, 국가개발은행 출범...이사장에 전일춘(3/1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린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가 전



달됐고, 국방위원회 대표 전일춘을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이사장으로, 재중동포 박철수를 부이사장으로 선거했다”고 밝힘.

- 또한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와 함께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힘.
- 이사회에서 선임된 전일춘 이사장은 노동당의 외화관리 및 김정일 위원장과 그 가족의 개인자금 및 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39호실장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산고급중학교 동창생으로 알려짐.

● 北, 신제품 담배 ‘내고향’ 개발(3/14,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4일 중국에서 입수한 이 담배는 북한이 최근 개발, 시제품으로 출시했으나 아직 북한에서도 시중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기타동향 (대내 경제)

- 중국과 합작으로 ‘전기자동차 개발사업’ 추진, 이달 중 공동실험예정 (3/11, 조선신보)
- KDI, ‘작년 북한 대외무역 11년만에 감소’ 발표(3/10, 연합뉴스)
- 北, 미국인 관광비용 인하(3/13, RFA)

다. 군사 관련

● 군사대국화책동의 본격화(3/8,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日 자위대와 駐日美軍의 공동훈련, C-130 수송기 배비 등 일본의 군사책동이 본토방어형에서 해외공격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日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경각성 강조

● 北, 美증원군 겨냥 중거리미사일 사단 창설(3/9, 연합뉴스)

- 북한이 사거리 3천km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신형 IRBM 사단’을 별도로 창설한 것으로 확인됨.
-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3천km 이상의 신형 IRBM 개발에 착수해 지난 2007년 이를 실전 배치하였으며, 이 미사일은 주일 미군기지 뿐 아니라 괌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확인됨.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인플레이 극심…물건값 싼 ‘국영상점’ 인기(3/10, 좋은벗들)

-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 ‘살인적인’ 인플레이가 계속되자 국정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국영상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전함.



- 이 단체는 소식지를 통해 “평양 제1백화점에서 가루비누, 담배, 과자류 등을 국정가격에 한정판매하고 있는데 치솟는 시장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평양 주민들이 이 백화점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함.
 - 좋은벗들은 “현재 북한의 민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도 단위 기관의 간부들은 현 국면을 헤쳐나가려면 중국에 손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덧붙임.
- 월드컵의 해…北에도 축구시즌 활짝(3/10, 조선신보)
 - 북한의 ‘최상급 축구연맹전’이 지난달 개막해 6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함.
 - 조선신보는 10일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2월20일부터 국내 최상급 축구연맹전 1차 경기가 벌어졌다”면서 “모든 선수들이 올해 첫 경기부터 겨울철 훈련기간 연마해온 육체기술적, 전술적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전함.
 - 신의주서 2월까지 아사자 300명 발생(3/11, 좋은벗들)
 - 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신의주 시당 조사에 따르면 2월20일 현재 약 300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식량이 없어 당장 굶어죽게 된 집도 약 1천여 세대에 이른다”며 “2월 들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죽어나가고 있다”고 전함.
 - 신의주시당의 한 간부는 “고난의 행군 시절(1990년대 중.후반)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던 신의주에서 3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전국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고 이 단체는 전함.
 - 美단체, 대북 지원 고민…영동한 곳에 배분(3/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을 지원하는 미국 민간단체들이 지원품 제대로 배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RFA이 보도
 -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지원해온 한 민간단체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을 불쾌해하고 지원 물품을 다른 지역에 임의로 배분하려 해 계속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함.
 - 다른 민간단체의 관계자도 “지난해 말 다른 곳에 유통될 것을 염려해 평범한 옷을 보냈더니 북한 측이 화사하고 예쁜 그림이 그려진 옷을 요구했다”며 “당이나 다른 곳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염려스럽다”고 토로함.
 - 이 관계자는 “최근 화폐개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측이 과거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은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지원 물품에 대한 임의 배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임.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3/13, 연합뉴스)
 - 15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심의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은 다양한 특수성과 이례성 등을 감안할 때 ‘독특하다(sui generis)’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비참하고도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다”고 말함.
 - 또한 “비민주적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북한 정권이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는 ‘공포국가’ 또는 ‘거대한 감옥으로서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

■ 기타동향 (대내 사회·문화)

- 제 17차 전국 여맹예술축전, 3.7-3.9 평양대극장에서 진행(3/10, 중통)
-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즈음 적십자 봄철나무심기 행사, 태천군안흥리에서 진행(3/10, 중통)
- 4·25예술영화촬영소, 3·11예술영화 ‘내가 사는 가정’ 시사회 대동문영회관에서 진행(3/11, 중통)
 - 당·국가 간부들, 우당위원장들, 상중앙기관 일꾼들 등 영화감상
- 미 국무부, ‘2009년 인권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상황 공개(3/12, 연합뉴스)

마. 6자회담(북핵)동향

- 키신저, 美, 북핵 동결만으로는 불충분(3/11, 연합뉴스)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핵문제와 동북아시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핵 동결은 현재 핵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남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동결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만약 양자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북핵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함.
 - 북핵 해결책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그와 더불어서 협상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 엘바라데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3/12, 연합뉴스)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명예 사무총장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 폐막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기폭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함.
 -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 “압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압력, 압박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핵문제 해결



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

2. 대외정세

- 김정일 최측근 ‘리철’ 제네바 대사 곧 이임(3/10, 연합뉴스)
 - 스위스 베른의 한 외교 관계자는 “리 대사가 이임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며 “다만 이임 시기가 수주일 내가 될지, 1~2개월 정도 더 걸릴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전함.
 - 리 대사는 1980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로 부임하며 제네바와 첫 인연을 맺었고,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인 1987년부터 제네바 UN사무국 주재 상임대표부 대사로 활동했으며 1998년부터는 주 스위스 대사를 겸임해 왔음.
 -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소개돼 온 리 대사는 비자금과 자녀, 건강 등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챙기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짐.

- 美법원, 北박의춘 외무상에 소환장(3/10, 미국의 소리(VOA))
 - 미국 법원이 김동식 목사 남북 사건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북한의 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1월 북한 박의춘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VOA 방송이 10일 보도
 - 방송은 김 목사의 아들 한 씨와 남동생 용석 씨가 지난해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법원이 지난 1월 14일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박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과 소장을 발송했다고 전함.
 - 김 목사의 가족은 소장에서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목사가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2000년 1월16일 북한 기관원들에게 납치된 뒤 수용소에 수감돼 가혹한 고문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고 방송은 전함.

- 전 北기관원 김종률 씨 ‘한국망명 거부당해’(3/12, 연합뉴스)
 - 오스트리아에서 20년 간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으로 활동했던 김종률(75) 씨는 한국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한국 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힘.
 - 잠적 전까지 빈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20년 간 활동하며 북한에 필요한 군수·산업용품과 건축자재 등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냈던 김 씨는 지난 4일 빈에서 ‘독재자에게 봉사하며(Im Dienst des Diktators)’라는 제목의 독일어판 자서전을 출간, 김일성 주석의 사생활을 폭로한 뒤 오스트리아에 망명을 신청함.
 - 그는 “당시 북한군 대좌로 호위사령부 제1국(행사조직국) 경비운수



부 기술담당 부부장이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조선기계수출입상사 부사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했다”고 함.

■ 기타동향 (대외)

- 노르웨이 적십자사 대표단(단장: 보르게 브렌데), 3월9일 방북(3/9, 중통)
- 김영남, 3.9 토고 대통령 『포르 에소짐나 그나쌍그베』재선 축전(3/10, 중통)
- 김영남, 3.11 칠레 공화국 대통령에게 就任 관련 축전(3/11, 중통)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공석웅 부상), 러시아 방문 후 귀국(3/11, 평방)
- 駐적도기네 北대사, 3.5 적도기네 민주당 총비서를 만나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줄 것을 강조(3/12, 중통)
- 러 APEC 건설현장 北노동력 대거 투입(3/12,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에 6천명분 노동비자 내줘

3. 대남정세

- 北최고사령부, 키리졸브에 전투동원태세 명령(3/8,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8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조선 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보도’ 형식의 발표를 통해 “전연(전방)과 해안, 대공 감시근무를 수행하는 인민군 장병들은 선제타격을 노리는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격파분쇄할 수 있도록 조국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킬 것”이라고 지시
 - 북한은 작년 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자 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 것”을 명령했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L) 군사연습 때도 최고사령부 명령을 통해 ‘전군·전민·전국 특별경계태세’를 지시한 바 있음.
- 반역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3/8,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南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韓-美 FTA, 세종시 수정안 등 인민들을 기만하는 반역정권에 대해 준엄한 심판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
- 北, 키리졸브 또 비난…‘핵억제력 계속 강화’(3/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8일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재차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공화국 정부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 제안을 내놓은 때 대규모 전쟁연습을 강행해 나선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
 - 이어 “군사적 위협과 경제 제재는 평등한 대화와 양립될 수 없고 비핵화와는 더욱이 양립될 수 없다”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 없이 군사적 대결이 해소될 수 없고 군사적 대결의 해소가 없이는 비핵화도 실현될 수 없다”고 덧붙임.
- 北통신, 6·15공동행사 성대 개최 합의(3/9,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7~8일 평양에서 남·북·해외위원장 회의를 열고 올해 6·15공동선언 10주년 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통신은 6·15공동행사로 기본대회, 사진전시회, 부문별 상봉, 예술공연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로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행사를 가지며 행사를 위해 각각 행사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고 전함.
 - 안경호 북측 위원장, 김상근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한 남측위원회 대표단, 광동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측위원회 대표단이 참석함.
 - 北신문,李大統領 3·1절기념사 뒤늦게 비난(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신문은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자(이 대통령 지칭)가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남을 걸고 주제넘게 놀았다”고 밝힘.
 - 신문은 또한 “남북이 북핵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새 로운 협력의 물꼬가 활짝 트일 것”이라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핵 문제를 북남관계 문제와 뒤섞어 놓아 남조선 인민들 속에 동족에 대한 불신감, 적대감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화과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야합해 동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양회 폐막..6자회담 재개 속도내나>(3/14)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공식 폐막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음. 지난달 초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이후 베이징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던 관련국들의 연쇄접촉 움직임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3~13일)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14일)를 거치면서 소강상태를 보였음. 양회 기간 중국의 대외관계 일정도 일정한 제약을 받았기 때문임.
- 실제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난 것 외에 양회 기간 별다른 외교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음. 양회가 시작되기 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잇따라 만난 것과는 대조적임.
- 따라서 국내 정치 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우다웨이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외교 당국자는 14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중국 양회가 끝난 만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다웨이 대표의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동인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 고위 외교소식통은 “북·미 추가대화는 아직 살아있는 카드지만 성사 조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다”며 “다만 북한이 태도를 바꿔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6자회담도 곧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일 6자수석 “北 조건 없이 복귀해야”(3/12)

-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음. 양측은 회동에서 현 국면에서 북한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같았으며 평화협정 체결문제도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6자회담이 조속히 열리도록 하기 위해 각국이 기존의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회담을 제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아직 판단할 만큼의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음. 양측은 또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와 5자의 상응조치를 담은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음.

● 키신저 “북미 회담 반대..6자회담지지”(3/11)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핵문제와 동북아시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만약 양자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북핵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키신저 전 장관은 “현재 북한은 상당히 많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유일한 성과가 핵무기 개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전 세계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두려워할 게 많지는 않다”라며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대응할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키신저 전 장관은 “전 세계에서 주요 몇몇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핵 능력을 계산할 수 있지만 핵이 확산되면 이러한 계산이 불가능하고 사용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 대단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접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을 경계했음.
- 이어 북핵 해결책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그와 더불어서 협상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북한은 매우 이상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권력 승계 문제를 잘 처리해 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사망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음.
- 그는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핵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환



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자 하는 게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정총리 “北, 하루빨리 6자회담 복귀해야”(3/11)

-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음.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10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핵 비확산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힘.
- 정 총리는 “원자력 이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과 확산, 핵물질 불법 거래 등은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음. 또 “원자력은 반드시 평화적인 이용이 전제돼야 하며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안전규제 체제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 총리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8기를 추가로 건설해 전체 전력소비량의 59%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용한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 주기기술을 개발해가고자 한다”고 말했음.
- 이어 “세계 각국이 원자력을 도입하고 원자력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이라며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세계 각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정 총리는 “이번 회의가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매우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의 공동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中·日, 6자회담 재개 방안 논의(3/9)

- 북핵 6자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9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음. 그는 이날 외교부에서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키 국장의 방중은 중국이 최근 6자회담 관련국들과 연쇄접촉하면서 각국에 “기존의 입장을 유연하게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뒤 회담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이키 국장의 방중과 관련, “유관 당사국들이 현재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키 국장은 방중에 이어 오는 12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당국자 “北입국 4명중 2~3명 제보 확인중”(3/9)

-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힌 우리나라 국민 4명과 관련, “현재로서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없다”면서 “가족 제보 등을 토대로 2명 정도를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지만 이들이 북한이 밝히는 4명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추가로 1명에 대한 제보도 들어왔지만 그가 북한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는 모른다”며 “북한이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어 6자회담 재개시기와 관련, “(재개) 직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날짜는 북한 마음에 달렸다. 미국은 자기들의 뜻을 밝혔으니 북한이 이제 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약속해야 추가 접촉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미가 다시 만나는 것은 우리 정부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포맷(format.형태)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과 관련, “가능성은 있으나 시점을 찾는 것은 어렵다”며 “모든 것은 북한의 결정”이라고 말하고 “김 위원장이 만일 베이징에 간다면 6자회담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11월로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깜짝쇼를 좋아하지 않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마도 북한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G20)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에 마카오의 한 바에서 어떤 사람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韓·中·日 6자 수석대표 연쇄 접촉(3/9)

-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향한 물밑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 측 수석대표가 중국과 한국을 연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중·일 3국의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8일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오는 12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이키 국장은 방한에 앞서 9일에는 중국을 방문,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비공식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한·중 연쇄 방문은 특히 중국이 최근 6자회담 관련국들과 연쇄접촉 과정에서 각국에 “기존의 입장을 유연



하게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뒤 회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사이키 국장의 방한은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 달 만임.

- 사이키 국장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총영사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 북핵 당국자들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져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양국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또 장원삼 동북아 국장과도 만나 양국 실무현안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日 6자 수석대표 12일 방한..한일 6자 현안 협의(3/8)

-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오는 12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이키 국장은 특히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등 북핵 당국자들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져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양국의 조율 향배가 주목됨.
-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사이키 국장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총영사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양자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키 국장의 방한은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달 만이지만 최근 중국의 중재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공동보조를 취해나갈 지 외교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사이키 국장은 장원삼 동북아 국장과 만나 양자 실무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美 “北 관계개선 원하면 인권 개선하라”(3/13)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12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킹 특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인권문제가 6자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중단된 협상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자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며 회담의 주요 초점은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된 뒤에는 인권문제를 포함해 다른 모든 이슈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킹 특사는 미국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측의 노력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스럽다”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美단체, 대북 지원 ‘고민’..“영퐁한 곳에 배분”(3/12)

- 북한을 지원하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 물품이 제대로 배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음.
-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온 한 민간단체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에 이어 내달에도 북한의 평안북도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북한 당국이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을 불쾌해하고 지원 물품을 다른 지역에 임의로 배분하려해 계속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음. 이 단체 대표는 또 “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데 왜 간섭하느냐, 간섭하려면 보내지 말라고 한다”며 “다른 곳도 다 굶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북측의 시각”이라고 설명했음.
- 다른 민간단체의 관계자도 “지난해 말 다른 곳에 유통될 것을 염려해 평범한 옷을 보냈더니 북한 측이 화사하고 예쁜 그림이 그려진 옷을 요구했다”며 “당이나 다른 곳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염려스럽다”고 토로했음.
- 이 관계자는 “최근 화폐개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측이 과거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은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지원 물품에 대한 임의배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美 “北 인권상황 개탄스럽다”(3/12)

- 미국은 11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개탄(deplorable)스럽다”면서 “북한 정권은 수많은 심각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거듭 규정된 뒤 무단처형, 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주민들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며, 여성 수감자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살해당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이 사실상 모든 정보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고, 독립적인 언론은 없으며,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종교의 자유도 없으며, 대중 매체나 학교, 노동자 기구나 지역 기구들을 통한 조직적 세뇌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음. 이와 함께 북한의 고문 실태와 관련, 폭행과 전기쇼크,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옷 벗기기, ‘형벌방’ 격리 등을 예로 들었음.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



서도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음.

- 보고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열거하면서 지난해 6월에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남한으로 가려던 주민 3명을 북한 해군이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도 소개했음. 이 밖에 보안기관인 인민보안성이 14만4천명의 인력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하고 있고, 정부 기관의 모든 직급에서 수많은 뇌물 관련 사례가 NGO(비정부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음. 아울러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우려했음.
- 마이크 포스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국가”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폐쇄된 사회로, 반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많은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음.
-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곤경을 계속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음.
-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정부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미얀마, 수단 등의 인권 상황도 강하게 비난했고,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구체적으로 중국과 관련,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계속적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고, 티베트 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음.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인권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 美 “대북제재 계속 이행”(3/11)

- 미국 국무부는 10일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이행 방침을 밝히면서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시도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최근 중국을 통한 북한의 여러 외자유치 노력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설득 노력을 무산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보도내용을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여하는 확산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대북제재의 변함없는 이행 방침을 밝혔음. 그는 “북한 내로 가는 외부 투자를 본지가 오래됐다”면서 “그것(외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투자)이 신중한 투자가 될지 잘 모르



겠다”고 언급, 대북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였음.

- 크롤리 차관보는 또 한미 양국이 8일부터 시작한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우리는 한국과 중요한 동맹 관계”라면서 “이전에도 이런 훈련들을 했고, 이런 훈련들이 북한에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한미 양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 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그들(북한)이 말하는 방식”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

● “美법원, 北박의춘 외무상에 소환장”(3/10)

- 미국 법원이 김동식 목사 납북 사건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북한의 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1월 북한 박의춘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음.
- 이 방송은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입수한 ‘발송 증명서(Certificate of Mailing)’를 인용, 김 목사의 아들 한 씨와 남동생 용석 씨가 지난해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법원이 지난 1월 14일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박 외무상으로 소환장과 소장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 김 목사의 가족은 소장에서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목사가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2000년 1월 16일 북한 기관원들에게 납치된 뒤 수용소에 수감돼 가혹한 고문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방송은 말했다.
- 이 법원은 또 2006년 7~8월 헤즈볼라가 로켓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관련,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인 30명이 헤즈볼라에 물질적 지원을 했다고 작년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21일 박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억 달러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8일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소환장 발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평양으로부터 지시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원고측의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쉼시재판을 요청할 것”이라며 “법원이 쉼시재판을 허용하면 원고측 피해에 대한 심리가 열려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고 그 이후 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 스티븐스 “北체제 힘으로 바꾸지 않을 것”(3/10)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미국은 북한 체제를 힘으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민족화해협력



- 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한미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9.19 공동성명 등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듯 미국은 북한 주민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이어 “우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이 핵무기 폐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이런 결정을 토대로 6자회담에서 다시 대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은 이웃과 더 나은 관계, 북한주민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국과 북한의 대화에도 찬성한다”며 “북한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지도부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최근)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행동이고,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 대화하는 것이 행동이다”고 말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의 핵보유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버마(미얀마)나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는 모두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이라며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모든 면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우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다른 사안은 분리해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원조받은 식량의 공급을 모니터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에는 이 분야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포진해 있다”면서 “이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시전작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언급, 스티븐스 대사는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전작권 전환결정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믿으며, 양국 관계 발전의 자연스러운 진전의 일부이며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방위에 대해 미국이 가진 확고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北, 中 동북지방에 해외반탐요원 증파” <RFA> (3/13)

- 작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동북 지방에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해외반탐(방첩)요원을 대폭 증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 RFA는 중국 공안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옌지시 공안국 모 부서에는 과거 6명 가량의 북한 요원들이 상주했지만 지난 2월부터 증강



돼 지금은 10여명이 넘는다”고 밝힘.

- 이 방송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반탐요원들은 내부소식을 외부로 전달하는 연락책을 적발하고 남한 대북인권운동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은 북한 내부소식통들이 중국 전화를 이용해 한국과 연락하는 점을 감안해 중국에서 전화기 명의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북중 국경을 봉쇄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지원이 이뤄져 감시카메라가 회령시 망향동과 유선구 등 주요 탈출통로에 설치되고 있다”며 “중국에서 제공된 무선전화기가 국경초소에 배치됐고 휴대용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기도 국경지역 보위부에 공급됐다”고 주장했다.
- 또 이 방송은 북한이 보안원을 동원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주민 장모씨의 언급을 인용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조사를 받는데 중국에서 행적과 남조선 사람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문한다”며 “앞뒤의 대답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일주일 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기도 한다”고 소개했음.
- 장씨는 “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도 금지사항이어서 보안원에게 발각되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조사받아야 된다”며 “이런 통제는 외부세계의 소식이 전파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평안북도의 김모씨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이 화폐개혁 후 알거지가 됐다가 장사밑천을 마련해 장사를 다시 시작하기는 하지만 간섭과 단속에 시달리다 못한 주민들 중에는 보안원에 대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北, 中-러에 라진항 개방(3/8)

- 북한이 중국에 라진항을 10년 간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러시아에도 신규로 50년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 중인 리룡시(李龍熙)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부서기는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 측이 라진항 3호 부두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2008년 중국에 제공했던 제1호 부두사용권을 10년 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제1호 부두의 사용권을 따낸 주체는 다롄(大連)의 환경설비 제조 전문업체인 창리(創立)그룹이며 이 회사는 개발권과 함께 최소 10년간의 독점 사용권을 이미 확보했음.
- 라진항은 1~5호까지 총 5개 부두로 구성돼 있음. 3호 부두는 1호 부두에 비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서기는 “1호 부두 사용권은 중국이 2008년에 취득했으며 현재 북·중 간 이에 대한 10년 추가 사용 연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이번 협의가 성공하면 중국 측은 2028년까지 라진항 1호 부두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게 됨. 리 부서기는 “현재 중국 측이 1호 부두를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건설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끝나는 대로 물류 수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 측은 이번 사업에 수천만 위안(수십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서기는 중국이 라진항 사용권을 얻음에 따라 운수 능력이 부족한 연변지역이 이를 이용, 지린성의 우수한 석탄자원을 동해를 통해 상하이(上海) 등 국내로 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등지로도 수출하는 등 태평양 지역과의 물류도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 앞서 지난달 28일 쑨정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당서기는 동북 3성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김영일 국제부장에게 지난해 중국 국무원이 확정된 ‘창지투(長吉圖, 장춘-길림-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을 소개하면서 “도로망과 기초 설비 건설 분야에서 지린성과 북한 간 새로운 합작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창지투 사업에는 지린성과 창춘(長春)시, 지린시 등이 관여함. 중국은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라진항을 낙후된 동북 3성이 태평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해왔음.
- 러시아도 라진항이 북·중 간에 국제물류기지로 개발되면 사할린과 시베리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라진항으로 보내 주변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실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라진-하산 철도복원과 라진항 개선에 합의하고 같은 해 말 1억4천만 유로를 출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인대 대표인 추이제(崔杰) 창춘 시장은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창지투 계획에서 창춘시가 핵심적인 경제역할로 경제적 발전을 추동해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날 일본의 산케이신문도 자국 대북인권단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이달 라선(라진-선봉)시를 방문해 “6개월 후에 이곳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대풍국제그룹의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 측이 두만강 개발계획을 축으로 국제투자를 유치할 복안을 갖고 있다”며 “차후 라선특별시와 청진항을 잇는 일대가 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물류, 교역의 중심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해온 북한·중국·러시아 3국의 두만강 개발계획에 조만간 복귀해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권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의 탈퇴를 선언했었음.
- 북한은 두만강개발을 축으로 해 라선-청진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중



장기적으로 신의주·함흥·김책·원산·안주·남포 등의 지역 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의 이런 경제개발은 이달 중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개발은행이 주도하며 외자 유치를 맡는 조선대풍그룹이 그 집행기관 역할을 할 예정임.

● 류홍차이 신임 중국대사, 평양 부임(3/8)

- 북한 주재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중국 대사가 8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김 상임위원장은 류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그와 담화를 했다고 전했으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음.
- 신임 류 대사는 베이징 제2외국어학원 일본어과를 졸업했고 1989~1992년에는 주일 중국대사관에 근무했으나 2003년 6월부터 대외연락부 부부장(차관급)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방북하는 등 대북외교에 깊숙이 관여해온 ‘북한통’임.
- 2007년 대외연락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했고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2008년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수행해 각각 북한을 다녀갔으며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음.

● “北김영남 방중계획 들은 바 없다”(3/8)

-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음.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8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해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확인했음.
- 이 소식통은 “(가능성 차원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딴 곳을 가다가 거쳐 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국가수반급의) 방문이 있다는 얘기는 없다”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한 당사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을 대신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방중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있음.
- 일부 언론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하면 북한의 현안인 경제문제보다는 북핵문제 등 정치적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부가 불안정하다는 점 등을 들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대신 방중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대북경제협력기금 의미 줄어”(3/12)

- 중국의 대북 100억 달러 투자설이 대두하면서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기금 제공이라는 카드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일본 대북경제전문가가 지적했음.



- 고마키 데루오(小牧輝夫) 고쿠시칸(國士館)대 교수는 12일 도쿄 외 신기자센터(FPCJ)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은 10년 전 북한에 경제 협력자금 50억~1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불확실하긴 하지만 최근 중국이 북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써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기금 제공 카드는 과거와 같은 효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고마키 교수는 “최근 러시아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고 대북 송전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라진항 개방을 계기로 중·러와의 관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이 이처럼 대외 개방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과 무역량이 11년 만에 줄고 중국과 무역량도 감소한데다 지난해 옥수수와 감자 작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경제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 고마키 교수는 또 북한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하고 농업·경공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대외무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日 요도호 납치범, 귀국교섭 요청(3/10)

- 일본 민항기인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에 망명했던 적군파 조직원들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에 귀국 교섭을 요청하는 서한을 다음달 발송하기로 했다.
-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1970년 일본항공(JAL)의 민항기인 요도호 납치해 북한에 망명한 적군파의 대리인인 야마오카 유키오(山中幸男) 구조·연락센터 사무국장은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적군파 조직원들이 다음달 하토야마 정부에 귀국 교섭을 하기 위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 요도호 사건의 범인 9명 가운데 북한에 생존해있는 4명은 일본에 귀국해 재판을 받고 사건을 종결짓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국제 수배를 받고 있는 적군파 우오모토 기미히로(魚本公博, 61)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적군파 조직원의 처 2명은 납치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수배를 해제해야 일본 정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임.
- 요도호 납치범들은 과거 자민당 정권 때도 귀국 교섭을 요구하는 서한 등을 보낸 바 있으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음. 요도호 사건은 1970년 일본에서 적군파 요원 9명이 하네다공항을 이륙한 JAL 여객기(승객 129명 탑승)를 납치해 북한에 망명한 일본 최초의 민항기 공중 납치사건임.



마. 일·러 관계

● “러 APEC 건설현장 北노동력 대거 투입”(3/12)

- 오는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장 건설을 위해 북한 노동력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 러시아 연해주(프리모르스키주) 주의회 빅토르 가르차코프 의장은 지난 11일 현지를 방문한 북한 외교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APEC 회의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북한에 6천명분의 노동 비자를 내줬다”고 밝혔다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 ‘프리마 미디어’가 12일 보도했음.
- 가르차코프 의장은 또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노동자의 훈련과 안전 사고 예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주의회 의원들은 루스키섬(블라디보스토크 앞섬) APEC 회담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금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협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했다”고 밝혔음.
- 러시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도로와 교량 등을 건설하기 위해 이미 북한 노동자 1천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 노동자는 크게 늘어날 것임.
- 이에 대해 북한 대표단의 궁석웅 외교부 부상은 “라진-선봉지역 개발에 많은 러시아 기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특히 석유 공장 재건, 하산(러시아)-라진 철도 재건, 라진항 개발, 라진선봉지역 관광발전 등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음.
-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앞에 있는 루스키섬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현재 섬을 잇는 연륙교를 비롯해 공항 및 도로 확장, 회담장으로 사용될 호텔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바. 기타

● “北, 미국인 관광비용 인하”<RFA>(3/13)

- 북한 당국이 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폭 인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미국의 북한관광 전문여행사인 ‘아시아태평양여행사’ 월터 키츠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가 미국인 여행객에게 적용하는 호텔, 교통 등 관련 비용을 유럽, 일본인 여행객과 똑같이 책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키츠 대표는 “이로써 미국인이 북한 관광에 지출하는 경비가 이전보다 약 16%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여행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이 미국인 관광객의 상시 방북과 체류 기간의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과 동등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가격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라며 “미국인 관광객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그는 “미국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잇따른 제한 조치의 해제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꾀하고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벌이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 북한의 최대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는 이미 올해부터 미국인이 일년 내내 북한을 여행할 수 있게 했으며 체류 기간도 기존의 4박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했음.

● 엘바라데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3/12)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명예 사무총장은 12일 “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 폐막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기폭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 앞서 그는 11일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9개국”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 “압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압력, 압박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핵문제 해결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 안정을 약속하고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그는 “9.11 사건 이후 안보가 무척 중요해졌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모든 물리적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보호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군축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무기고를 3분의 1로 줄이고 핵보유국들이 진지하게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핵군축이 NPT에서 다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 그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관해선 “한국은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로서 안정성에 유의하고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연료의 재처리나 재활용, 농축에 있어서 양자보다 다국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中서 北관광열차 등장..대규모 관광 가능(3/10)

- 중국 당국이 4년 만에 자국민들의 북한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한 가운데 대규모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는 북한관광 전용 열차가 처음으로



로 등장했음. 절강재선(浙江在線)은 10일 저장(浙江)성의 중국여행사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20일 저장성 항저우(杭州)에서 북한 관광 전용 열차를 운행키로 했다고 보도했음.

- 이 열차는 항저우에서 출발, 허베이(河北)성 베이다이허(北戴河)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단둥(丹東)을 거쳐 북한 신의주까지 운행함. 신의주에서는 북한 열차로 갈아타고 평양 등을 관광하게 됨. 이 관광 노선은 베이다이허와 선양 등 중국의 관광지를 돌아본 뒤 북한에 들어가 판문점과 묘향산, 개성문, 김일성 고택, 보현사 등을 포함함.
-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한 달여 뒤에 출발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베이다이허 등도 관광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이미 300여 명이 신청할 만큼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북한에 친숙한 노년층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음.
- 중국 당국은 북한 관광에 나선 자국민들 사이에 도박 열풍이 불자 2006년 2월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내달 12일부터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韓 미사일지침 개정요구 수용 각오해야”(3/12)

-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의 관리, 배치를 전담할 별도의 사단을 창설하는 등 미사일 위협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워싱턴D.C.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1일 북한이 ‘무수단’이라고 서방에 알려진 IRBM 전담 사단을 창설했다는 최근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음.
- 클링너 연구원은 “미 행정부는 우선 한국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타격능력을 한국에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한·미 공동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과 전시 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우려 때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사일 지침이란 한국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사항이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미사일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제기돼 왔음.



-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국은 미사일 방어의 개발과 배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역 미사일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는 다단계 미사일방어(MD)시스템의 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클링너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다단계 MD에 그 이전 정부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상기시켰음.
- 그는 “미사일 및 핵무기 능력을 키우려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억지하는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최근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유화 공세’를 포기하고, 다시 한번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북한이 2007년 실전배치를 시작한 IRBM은 사거리가 3천km 이상으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김중훈 “한·미FTA, 11월 중간선거 전 비준 어려워”(3/12)

- 김중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사실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김 본부장은 이날 무역협회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갖고 “미국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음.
- 김 본부장은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 이후 이와 관련해 비준타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발언대로 한·미 FTA는 반드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한·EU FTA에 대해선 “유럽의회 등 현지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만 유럽 주재 일본기업들 중심으로 실익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상당한 견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EU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선 “EU는 평균 관세율이 5.2%로 미국보다 높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18조4천억 달러로 미국을 능가한다”며 “협정 발효 이후 한·EU 교역액이 연간 47억달러 늘어난다는 등 가시적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 무역 비중이 전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재 FTA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총교역액 중 FTA 교역비중이 80% 이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 본부장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김연아 선수, 동계올림픽 선전 등과 마찬가지로 G20



회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 등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제고된 만큼, 국제원조 부문에 있어서도 경제 규모에 맞는 대외원조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산美기지 터미널 확장..미군 신속전개(3/12)

- 주한 미공군의 허브인 오산기지가 터미널 규모를 대폭 확장하고 일부 시설은 생화학공격에 대한 방호능력을 갖추는 등 한반도 방어를 위한 공군 중심기지로의 면모를 갖추.
- 12일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산기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7천 540여㎡ 규모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터미널을 완공해 오는 6월 말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감. 터미널과 함께 항공기를 터미널로 바로 연계하는 활주로 램프 시설과 한국 공군이 사용할 화물 빌딩 등도 함께 들어서며, 여기에는 약 1천860만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음.
- 오산기지 시설의 대규모 확장은 주한미군이 추진 중인 가족동반 3년 근무 개념인 ‘근무정상화’ 시스템으로 오산기지 이용자가 늘어나는 데다 유사시 주한미군과 미 본토로부터의 증원미군의 신속하고 원활한 전개를 위한 것임.
- 당장 다음 달부터는 미군이 주둔지와 미국 본토를 오갈 때 이용하는 전세기 서비스인 ‘패트리엇 익스프레스(Patriot Express)’가 재개되기 때문에 오산기지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지에는 북한의 생화학 공격 등으로부터 한반도를 오가는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압 소독 시설도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신속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항공기가 활주로 램프를 통해 터미널 앞까지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비행기에서 내려 한두 블록을 걸어서 터미널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됨.
- 또 터미널에는 전국 각 미군부대에 논스톱으로 연결되는 전용 버스가 있어 편리하게 배속 부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지금까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 평시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하는 출입국 심사대는 유사시 주한미군과 증원미군의 이동에 따른 출입국 업무를 보는 장소로 즉각 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짐. 주한미군 관계자는 “확장된 오산기지는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출입 통로로써 미군을 전국 각 기지에 보내는 핵심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샤프 “北WMD 제거부대 운용..키리졸브 참가”(3/11)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샤프 사령관은 이날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WMD와 관련, “한미 양국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하며 WMD의 위치 파악과 확보, 제거와 관련해 양국이 기밀히 협조하며 대응해갈 것”이라며 “이 같은 작전적인 전문성을 가진 제거부대를 미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습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참가할 것”이라며 “전작권 변환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한미 양국이 북한의 WMD 제거 작전을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미군이 직접 이 부대를 운용하는 한편 키리졸브 연습에도 참가시키는 등 그 실체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 샤프 사령관은 작년 10월30일 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북한의 WMD 제거부대는 주한미군 소속이 아닌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어 샤프 사령관은 “전쟁 발발 시 수도권을 파괴할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치를 식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적이 공격해오면 공군과 지상 자산을 운용해 격멸할 것”이라며 “매년 연습을 통해 확인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미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목소리에 대해 그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2012년 전환은 순조로울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전작권 전환 뒤 유일한 지휘관은 (한국) 합참의장이며, 양국이 합의한 단일 전쟁계획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무기체계를 획득하는지와 북한이 발언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작전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Foal Eagle)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 “방어 위주의 연습으로 세계 어느 군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동석한 황의돈 연합사 부사령관은 “연례적이고 상투적인 비난으로, 올해 연습 이후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북한이) 또 다른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한미 양국은 해외의 다양한 안보관계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 “美, 韓-日-말聯, TPP 조기 동참시켜야”(3/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활성화시키는 틀로 ‘범태평양파트너십’(TPP)을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도 조기 동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 쪽에서 나오고 있음.
- AP가 10일(이하 현지시각) 전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현재 APEC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및 브루나리로 구성되어있는 TPP에 미국과 북미자유 무역지대(NAFTA)를 구축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최대한 빨리 동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음.

- 연구소는 또 미국이 21세기의 아시아 무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TPP에 일본과 한국 및 말레이시아까지 “가능한한 빨리” 끌어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APEC 역내에서 미국을 배제시키는 무역 블록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이른바 ‘10 플러스 3’ 틀로 추진돼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쪽으로 갈 경우 미 기업의 무역 손실이 한해 최소한 250억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인의 고소득 일자리 20만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음.
- AP는 이와 관련해 TPP 1차 회동이 15일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된다면서 오바마가 18일 연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PP 회동에는 미국과 각각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호주, 칠레, 싱가포르 및 페루 외에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찬형치 주미 싱가포르 대사는 지난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청문회에 나와 “미국이 TPP를 발판으로 아시아 성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면서 “2030년까지 아시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980년 16%, 지난 2005년에는 27%였음을 상기시켰음.

● ‘전자권 전환 연기론’ 미국서도 솔솔(3/11)

- 미국 내에서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자권) 전환 시기를 연장하거나 아예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주목됨. 우리 정부가 전자권 연기론의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전자권 전환 문제의 연기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다.
- 오핸런 연구원은 2012년 전자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 한미 양국군이 긴밀한 조율을 하기는 하지만 각각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서 “지휘부를 분할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말이 안되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980년 실패로 끝났던 이란 인질구출 작전 이후 지휘권의 통일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추구해 왔다면서 한국군으로의 전자권 전환은 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자권 이전 문제가 나온 배경으로 “다양한 미국의 외교적 아이디어에 대한 한국의 저항에 좌절하면서 로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전자권 전환 문제를 한미 동맹을 약화시



키고 경시하려는 한 수단으로 봤을 수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도 한국의 주권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이 계획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 오해린 연구원은 “이제 한미관계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부분 때보다 상당히 낮다”면서 “럼즈펠드 장관이 국방부에서 나가고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면서 이런 진전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한국이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점 등을 열거하면서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 고려나 근본적인 재검토는 동맹 관계의 신뢰 및 성숙함의 신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2년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사과나 지나친 성급함, 미리 결정된 결론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앞서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도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 벡톨 교수는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3월호’에 실린 글에서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북한의 위협에는 충분히 맞서 싸울 능력이 있지만, 고도로 진화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억지, 패퇴시키는데는 여전히 미군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단일 주제로 내건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나. 한·중 관계

● 中, 柳외교 방중에 기대감 표시(3/11)

- 중국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중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명환 장관이 양제츠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17~19일 방중한다고 발표하면서 “유 장관의 방중은 한·중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국제문제에서의 협력을 긴밀히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6자회담 문제를 포함해 양자 및 다자간 영역에서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이뤄내기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친 대변인은 한·중 관계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양국은 빈번한 고위층 상호방문, 밀접한 무역관계, 활발한 인적 교류, 국제문제에서의 대화와 협력 등 각 분야에서 매우 협력적이고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중 관계에 대해 중국은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면서 “이는 양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유 장관은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중국을 방문, 양제츠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예방할 예정임. 그는 베이징(北京) 방문에 앞서 상하이(上海)를 들러 오는 5월 개최되는 엑스포 예정지를 시찰하고 상하이시 주요인사를 면담할 계획임.

● “中한상대회, 한중교류확대 디딤돌 될 것”(3/9)

- 오는 6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개최되는 제1회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 소개를 위해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연 한·중 양국 3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은 이번 대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음.
- 신형근 선양 총영사와 박근태 중국한국상회 회장, 양야저우(楊亞洲) 선양시 부시장은 “이번 대회가 한·중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음.
- 신 총영사는 “동북 3성에 대한 한국의 교역과 투자 규모는 2007년까지 중국 투자의 10%에 그쳐 연해지역보다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음. 그는 이어 “지리적으로 한국과 근접해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데다 ‘동북 노후기지 진흥책’으로 대표되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 동북 3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선양시는 동북 3성의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도시”라고 소개한 뒤 “잠재력이 풍부한 선양에서 중국 최초의 글로벌 한상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동북 진출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신 총영사는 또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해왔던 선양시, 더 나아가 동북 3성이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박 회장 역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양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한상대회에 큰 의미를 부여했음. 그는 “중국 최초의 한상대회를 선양에서 개최키로 한 이유는 선양한국상회와 선양시가 그동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교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중국 각 지역의 한국상회가 유치 경쟁을 벌였던 KBS 전국노래자랑이 지난해 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선양에서 열렸던 사실을 상기시킨 박 회장은 “8년 전 중국에서 한국 구간을 가장 먼저 개최한 도시이기도 하다”고 선양시에 고마움을 전



했음. 그는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명실상부한 한상(韓商)들의 경제 엑스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대기업을 비롯해 보다 많은 한국 기업가들이 참가,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

- 양 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양을 비롯한 동북 3성이 한국 기업에 널리 알려져 양국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했음. 양 부시장은 “2012년이 되면 선양은 베이징과 하얼빈, 다렌 등과 고속철도로 연결돼 1~2시간 생활권에 접어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고 밝힌 뒤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충분한 매력에 있는 도시”라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장비제조업과 자동차 산업, IT산업, 부동산 투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우수 기업과 선진 기술이 선양에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며 “글로벌 한상대회가 선양을 알리고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외무성 공개문서 면밀 검토중”(3/14)

- 정부는 14일 연합뉴스 보도로 확인된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일본 외무성 내부분견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음.
-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의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명기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당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와 관련한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를 비롯한 1965년 당시 3건의 내부분서에서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일부에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 사법 당국은 판례를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이상득, 日중의원 의장과 의원교류 협의(3/11)

-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1일 오전 요코미치 다카히로(橫路孝弘) 중의원 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간 의원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이 의원은 이어 일본 정계의 원로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를 예방, 한일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음. 이 의원은 오후에는 차세대 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개발 선두기업 토레이를 방문,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사장과 한국에 대한 기술 투자와 기술이전 문제를 협의했음.

● 日대사 “올해 한일관계 진전하는 해 만들어야”(3/10)

-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는 10일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납치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음. 시게이에 대사는 이날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6자회담에서 양국 간 여러 현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일본의 대북 기본방침은 납치문제와 핵, 미사일이라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조기에 국교정상화를 꾀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인권과 관련한 중대사안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일·북간 합의에 따라 실천한다면 일본도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이미 합의된 바 있는 비핵화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실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은 6자회담이 아주 현실적인 틀이라고 생각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말했음.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선 “비핵화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문제”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음.
- 시게이에 대사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올해 한일관계와 관련, “올해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한 해로, 미래를 향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시작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다”며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양국이제로섬적인 논의를 넘어 냉정하게 분석하고 공동작업을 하면 얻는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며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게 양국의 공통된 이익”이라고 했음.
- 그는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 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일관계를 좀 더 글로벌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음.
- 태평양전쟁 때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과 관련, 그는 “저희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던 사안으로 일본 법률에 입각해 국적과 상관없이 그



렇게 결정된 것인데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생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그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한국의 선전을 거론하며 “정말 놀라웠고, 일본에도 괜찮은 선수들이 꽤 있는데 좋은 성과를 못냈다”며 “일본은 한국의 신속한 경제회복,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올림픽에서의 활약 등을 계기로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음.

● “日민주당 진영과 新네트워크 구축 필요”(3/9)

- 강상중(60.姜尙中) 도쿄(東京)대 교수는 9일 서울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제22차 포럼에서 “한국의 일본 인맥의 대부분은 55년 간 일본을 이끈 자민당 계열이다”고 지적한 뒤 “하토야마 정권이 탄생한 만큼 한국도 범민주당 진영과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재일 한국인 2세로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한국 국적자 중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된 그는 “일본이 명치유신 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했는데 다 역사, 독도, 재일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참정권 문제 등에서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주는 세력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음.
- 그동안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자이니치 논객(在日論客)’으로 널리 알려진 강 교수는 이날 ‘재일 논객 강상중이 본 신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독도문제에 언급, “일본에서 일부 정치가들이 독도에 대해 아무리 망언을 하더라도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완전히 번복하는 것은 전쟁 말고는 불가능하니 너무 큰 이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미·캐나다 사이에도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 재일교포를 위시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 “민주당 정권이 안정되고 올 여름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경우 좀 더 적극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본 뒤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정국하에서는 법안 가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 강 교수는 한일병탄 100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한일 간 친밀관계를 저해할 요인으로 ▲과거사 ▲독도 ▲대북한 입장 유지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무역역조 심화 등 5가지를 제시한 뒤 “향후 신 한일관계 10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양국이 지혜롭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 교수는 하토야마 정권의 존망도 위협할 수 있는 올 여름의 참의원 선거 전망과 관련, 정치 안정과 혼미 정국 등 2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선거 결과가 어찌되든 대대적인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경우, 안정적인 정국 운영 속에 자민당이 보수·우익의 강경 그룹과 약간 보수적이나 변화를 수용하고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그룹, 또 재정과 규율을 중시하고 시장의 힘을 중시하는 그룹으로 3분열 될 수 있다는 것임.
- 이런 가운데 창가학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특히 재일동포 참정권을 지지하는 공명당과 자민당 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하나가 되고, 이 세력이 민주당과 손을 잡게된다면 자민당은 소멸될 수 있으며 이렇게 민주당도 구자민당 중심의 55년체제와 같은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임. 그는 “이렇게 되면 한국은 비교적 양호한 한일관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반면, 민주당이 참패하면 3가지 방향으로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그는 내다봤음.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및 외국인 참정권 부여 등에 긍정적인 리버럴 그룹과 구자민당 내 양질적인 보수파와 공명당 연합 등 변화에 대응하는 보수파, 또 미국의 네오콘과 비슷한 우파 등이 고이즈미 개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3자 연립 정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강 교수는 이어 일본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현안으로 800조엔에 달하는 재정적자 문제를 든 뒤 “5~10년 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자의 심화시 국제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 급상승과 엔화 가치 급락을 초래, 현재 한국의 원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엔화의 가치가 반대 국면을 보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적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성엽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정재정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전 외무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진현 세계포럼 이사장, 미즈코시 히데아키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임성준 전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음.

● “日총리, 과거사 보상 용의 비공식 표명”(3/8)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해 순차적으로 보상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됨.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민간청구권 소송 대리인인 마이클 최 변호사(미 필라델피아 거주)는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일제 강점기의 징용, 징병 등 과거사 문제 전반에 관해 순서를 두고 보상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미국의 한 중진 의원에게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최 변호사는 이 중진 의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초 이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 하토야마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하토야마 총리가 다른 일본 정치인들과 달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일본 민주당 정권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토야마 총리의 이런 입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됨.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지, 아니면 민간기금을 통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함.
- 한편 최 변호사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와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 등과 공동으로 일제 때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소송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 변호사는 강제 징용, 징병자와 위안부의 피해보상 소송이 일본과 미국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10만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반환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해 단계적으로 과거사 보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이러한 문화재반환 소송이 일본의 과거사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본이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를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일본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최 변호사는 이를 위해 조만간 일본 내에 사무소를 설치, 소송 작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 반환소송에 한국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기 어려운 만큼 NGO와 사찰, 개인 등이 소송 주체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문화재 반환소송을 비롯해 일본의 과거사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소재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6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양순임 회장과 마이크 혼다 미 연방하원의원, 다카기 겐이치 일본 변호사 등 관련인사들이 회동했다고 밝혔다.

라. 미·중 관계

● <中, 美 환율 압박에 ‘긴장’>(3/12)

- 중국 언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미국 수출입은행 주최 연례 콘퍼런스 연설에서 위안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의 환율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음.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2일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절상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면서 “이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이 향후 위안화 환율 문제로 계속 트집을 잡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적지를 안고 있는 국가는 저축을 늘리고 수출



을 확대해야 하며, 반면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인 환율체제로 옮겨간다면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음.

-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1월 대중 무역적자가 늘어났다는 미국의 무역통계가 발표된 날 나온 것임.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월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 12월(181억4천만달러)에 비해 약간 늘어난 183억달러를 기록했음. 특히 미국의 대중 수출규모는 전월에 비해 17.6% 감소했음.
-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지목한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확대 방안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통신은 내달 15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했음.
-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압력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왔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위안화 환율과 무역 문제에서 자국을 압박한 것에 대해 “위안화 환율 문제가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비판과 압력 행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발했음.

● <중도 인권보고서..‘美 너나 잘해’>(3/11)

- 미국이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중국 정부도 12일 자체 인권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스스로 열악한 인권상황을 먼저 돌아보라”고 맞받아쳤음.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2009년 미국의 인권기록’이란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이 보고서는 미국 자체의 인권침해 상황을 폭로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인권을 내정간섭과 정치적 이익 도모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의 인권경찰을 자처하며 인권문제에서 자국과 다른 나라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 타국에 근거 없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스스로의 위치를 돌이켜보고 국내의 인권을 먼저 개선하라”고 촉구했음.
- ‘2009년 미국의 인권기록’은 미국의 인권실태를 생명과 인신 안전, 국민의 정치 권리, 경제·사회·문화권리,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의 권리,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침해 등 6개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음.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국이 국민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등을 도·감청함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또 중산층 가정의 2008년 소득은 5만300달러인데 반해 히스패닉과 흑인 중산층 가정의 소득은 백인 가정의 60%대에 불과하다며 인종차별의 심각성도 부각시켰음. 이와 함께 2008년 미국에서 490만건의



폭력범죄와 163만건의 재산범죄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2008년 미국에서는 1만4천180명의 총기사건 희생자를 포함해 3만명이 총기와 관련된 사건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음.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인권 침해사례도 늘어 미국 시민들의 항의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음. 미국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도 크게 늘어 2008년 현재 빈곤층 인구는 398만명으로 집계됐고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음. 또 미국의 설문조사를 인용, 저임금 노동자들 상당수가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국이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11년째 발표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 못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알가알부할 자격이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미국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미얀마, 수단 등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난했음.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계속적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고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음.

● 삼성研 “美·中, 美·日 관계 최악”(3/11)

-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작성해 온 ‘한반도 안보지수’ 조사에서 미국·중국, 미국·일본 관계 지수가 최악을 나타냈음. 연구소가 11일 발표한 ‘한반도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한반도 안보지수의 현재지수는 50.07을 기록, 지난해 4분기(53.65)보다 낮아졌음.
- 다만, 기준치 50은 넘어 현재 안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수를 구성하는 남·북한 및 주변 4강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한(45.36)을 제외한 5개국 모두 50을 넘었음.
- 연구소는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체제 불안과 6자회담 참여의 불확실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가능성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함.
- 미·중 관계 지수는 1분기 36.81을 기록, 2007년 3분기 이후 처음 기준치 밑으로 내려갔음. 지난해 4분기(57.77)와 비교하면 20.96포인트나 하락했음. 연구소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나 달라이 라마 접견 발표 등을 고려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라며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낮은 점으로 미뤄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 갈등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음.
- 미·일 관계 지수 역시 하토야마 내각 출범을 계기로 빠르게 나빠진 데다 후텐마 기지 이전과 도요타 자동차 문제 등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36.11로 떨어졌음.
- 연구소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도 양측의 입장 차 탓에 조기 성사되기는 어렵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



문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 회담 성사 시기는 더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 中 “美 기후변화에 더 앞장서야”(3/10)

-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더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셰전화(解振華)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 중인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더욱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음.
- 세 부주임은 미국이 경제능력이나 종합적인 국력, 기술 분야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솔선수범해 감축시키고 개발도상국에 자금 및 기술이전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현재 계획은 개도국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음. 그는 오바마 정부가 과거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음을 알지만 이 같은 국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핑계로 책임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음.
- 미국 하원은 지난해 6월 미국 대기업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 감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의 통과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반면 중국은 지난해 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2005년 대비 40~45%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세 부주임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2년에 한번씩 구체적인 정책과 배출량 감축 현황 및 정책 효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차량 및 모터, 전등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이날 회견에서 부주임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국제사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선진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그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중국이 외부의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면서 “외부에서 우리의 감축 현황을 평가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음.

● “미, 東亞전략보고서 개정 검토”(3/10)

- 미국은 핵무기 확산이나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 (EASR)를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를 비롯한 소식통들이 9일 밝혔음.



-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는 냉전 후의 구조 정립을 위해 발표된 것으로 실제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지난 1998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변화가 있게 되는 셈임. 1995년 보고서와 1998년 개정판의 경우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에 이미 배치된 10만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이번에 개정을 검토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위협으로 꼽은 것은 ▲핵 무기 확산 ▲중국의 강화되는 군사적 영향력 ▲테러 조직망들이라고 이들 관리는 말했음. 미 국방부의 데릭 미첼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역할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미첼 부차관보는 또 보고서가 최신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음.
- 지난 1995년 첫 보고서의 초안 작업을 주도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개념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겠지만 보고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미국 관리들과 다른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개정안의 내용은 미·일 동맹의 미래 모습,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심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이 미·일관계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음.

마. 미·일 관계

● 하토야마 “비핵 3원칙 견지하겠다”(3/10)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과거 정부의 미국 핵 반입 허용 ‘밀약’에도 불구하고 비핵 3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10일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외무성 전문가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미·일 핵 밀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이후 기자들에게 “비핵 3원칙은 계속 견지하겠음.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것으로 1968년 이후 사실상의 국시임.
- 하토야마 총리는 미·일 핵 밀약 확인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결코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그는 “정권을 바꾼 민주당 정부가 과거의 밀약에 대해 자료까지 포함해 공개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면서 “핵을 포함한 역지력이 미·일 안보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본의 외무성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9일 의혹이 제기된 네 가지 미·일 밀약설 가운데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미국의 핵 반입



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하고도 비밀 의사록에서 핵 탑재 함정과 항공기의 기항·통과·비행 등을 허용한 것 등 3가지 밀약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日, 핵 반입 등 美日 3밀약 인정(3/9)

- 일본 정부가 미국 핵의 일본 반입,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오키나와 반환 때 원상회복비의 일본 부담 등 미국과의 3가지 밀약을 인정했음. 하지만 밀약 의혹이 제기된 4가지 가운데 오키나와 반환 당시 오키나와 핵 재반입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약에서 제외했음.
- 미국과 일본간 네 가지 밀약 문제를 조사해온 일본 외무성 전문가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에게 제출했음.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일본으로의 핵 반입을 허용한 것과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 당시 원상회복비를 일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출동 등 3가지 합의를 ‘밀약’으로 인정했음.
- 전문가위원회는 이들 밀약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오는 과정이 배경이 됐지만 이는 과거 정부의 거짓과 부정직이었다”고 평가했음. 이들 밀약은 사실상 일본의 국시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천명하고도 이를 묵살 또는 위반한 셈이어서 정부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됐음.
-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 1월 발표한 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임. 과거 자민당 정권은 미국에서 공식 문서나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밀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이를 전면 부인해왔음.
- 일본 외무성은 ‘미·일 간 밀약은 없었다’는 자민당 정권의 공식 입장을 변경하기로 하고 밀약 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작년 9월 정권 출범 이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밀약설의 진위 규명 작업을 벌여왔음.

● 日, 후텐마 이전 논의 본격화..난항 예상(3/9)

-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논의에 들어갔지만 벌써 국내외에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전지 선정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일본 정부는 8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오키나와 기지 문제 검토위원회(위원장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를 열고 연립여당의 일원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의견을 들었음. 사민당은 현재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후텐마 기지를 일본 밖인 미국령 괌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국민신당은 15년 안에 오키나와현 밖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캠프



슈워브 육상(陸上)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음.

- 일본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결정하고 5월 말까지 결론 낸다는 방침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캠프 슈워브 육상안과 미군 화이트비치 앞바다 매립안 등 두 가지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이전 협상의 이해 당사자인 미국측과 오키나와현 주민은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에 대해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임. 앞서 미국 측은 슈워브 육상안에 대해 “2005년에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기지 내 사격 훈련에 장애가 있어서 기각했다”며 “2006년에 미-일 정부가 합의한 대로 캠프 슈워브 연안부로 옮기는 게 최선”이라고 표명했음. 또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있음.
- 오키나와현 나고시 의회는 8일 오전 슈워브 육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나고시 의회는 “기지를 육상으로 옮기면 연안부보다 주택가에 더 가까워진다”며 “소음이나 위험성 등 후텐마 기지의 문제를 그대로 나고시로 옮길 뿐인 만큼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한편 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8일 밤 하토야마 정권이 5월말까지 후텐마 이전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음.

● “美, 일본 실세 오자와와 직접대화 시도”(3/8)

- 미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을 워싱턴으로 불러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음.
-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7일 일본과 미국 관리들을 인용, 양국 외교관들이 이르면 내달 오자와 간사장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며 오자와 간사장은 방미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음.
- 이들은 또 지난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자와 간사장을 비공식 초대했다면서 이는 일본의 새 지도부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평했음. 또 미국의 한 관리는 오자와 간사장의 방미 초청이 더 많은 일본 민주당 의원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미국 측 협상 파트너와 만나게 하려는 움직임의 일부라고 주장했음.
-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자와 간사장을 초청하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지난해 일본의 정권 교체로 기존 대화채널이 파괴된 후 양측이 대화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음.
- 과거 자민당 집권기에는 워싱턴의 소수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의 정관계 파트너와 연락을 취하면서 비교적 손쉽게 소통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이를 대체할 채널이 거의 없다는 설명임. 그러나 오자와 간사장의 미국 초청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칫 하토야마 총리 대신 스캔들로 얼룩진 ‘실세’를 선호한다는 인상을 주고, 결과적으로 하토야마 총리의 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 제럴드 커티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병풍 뒤 실세와 타협하면서 어떻게 일본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겠느냐”며 오바마 행정부의 오자와 간사장 초청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美 인권보고서 객관성 상실”(3/12)

- 미국이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러시아가 ‘객관성이 없다’며 반발했다고 13일 러시아 R-TV 등이 보도했음.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 국무부의 ‘2009 인권보고서’는 객관적이지 못하며 자국에 대한 인권 상황은 무시하고 있다”며 “보고서를 낸 것은 자국의 정치 문제를 풀려는 의도”라고 항의했음.
- 11일 발표된 인권보고서는 “러시아 법원이 민족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계속 차별하고 있지만, 인종차별주의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소수 민족과 유색인종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러시아 외무부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접근방식이나 결론 등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우리와 관계 재설정(Reset)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많은 차이를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외무부는 “미국이 자국 인권 실태보고서를 낸다고 하니 다행스럽다”며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며 가정 폭력이나 아프가니스탄과 관타나모 수용소 인권 문제 등도 다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앞서 중국 정부도 12일 자체 인권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스스로 열악한 인권상황을 먼저 돌아보라”며 “미국은 다른 나라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인권을 내정간섭과 정치적 이익 도모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비판했음.

● 러시아에 스킨헤드 등 단체 7만개<美보고서>(3/12)

- 러시아에서 인종 혐오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한국인 인명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러시아에 약 7만 개의 스킨헤드 등 극단적 민족주의 단체가 있다고 12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음.
- 미 국무부가 전날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 약 1만 5천~2만 명의 네오파시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만 명이 극단주의 청년 조직 활동에 가담하고 있음. 또 2월 현재 스킨헤드 등



급진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만 7만 개에 달함.

- 보고서는 “법원이 민족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계속 처벌하고 있지만, 인종차별주의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소수 민족과 유색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최근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출신자 등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폭력과 인종 차별이 계속 늘고 있다”며 “지난해 인종혐오 범죄가 줄긴 했지만, 스킨헤드 조직과 다른 극단적 민족주의 단체들은 인종차별성 폭력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1만 2천900건의 인종과 종교 차별로 인한 폭력이 발생했음. 한편, 러시아 내무부는 자국 젊은이의 약 15%가 극우파에 동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러시아 내 인종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71명으로 2008년에 비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편이며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 추세임.

사. 기타

● 하토야마 “조선학교 무상화 여부 미정”(3/11)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1일 조총련계 조선학교(고교과정)의 학비 무상화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음.
- 하토야마 총리는 일부 언론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부인했음.
-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고교무상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조선학교의 무상화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음. 전날 열린 중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 출석한 교육전문가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론에 우려를 표시했음.
- 미와 사다노부(三輪定宣) 지바대 명예교수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제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그는 “국제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 “냉정하게 긴 안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음.
- 오카와 마사히토(小川正人) 방송대 교수는 “정치적 배려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며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전 北기관원 김종률 씨 “한국망명 거부당해”(3/12)

- 오스트리아에서 20년 간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으로 활동했던 김종률(75) 씨는 한국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한국 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음.



- 은신 16년 만에 최근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6년 한국 망명까지 생각하고 주(駐)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접촉했으나 잘 안 됐다”면서 “대사관 관계자가 거절했으니, 한국 정부가 거절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뽀 달린 공산당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와 대해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당시 김 씨가 대사관 측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일이 진행되던 중 김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다시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에도 대화가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다”면서 “이번 기자회견 후에는 전혀 접촉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잠적 전까지 빈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20년 간 활동하며 북한에 필요한 군수·산업용품과 건축자재 등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냈던 김 씨는 지난 4일 빈에서 ‘독재자에게 봉사하며(Im Dienst des Diktators)’라는 제목의 독일어판 자서전을 출간, 김일성 주석의 사생활을 폭로한 뒤 오스트리아에 망명을 신청했음.
- 김 씨는 “사람이 70세가 되면 죽음을 생각하는 법”이라면서 “이렇게 그냥 죽어야 하나 자문(自問)한 끝에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북한군 대좌로 호위사령부 제1국(행사조직국) 경비운수부 기술담당 부부장이었으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조선기계수출입상사 부사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했다”면서 “금속탐지기, 독가스탐지기 등 신변보호 장비와 창문, 벽지, 타일까지 김일성 주석의 별장에 들어갈 물건들을 모두 실어 보냈다”고 회고했음.
- 그는 또 1994년 잠적한 이후 “빈 외곽에 있는 조그만 농촌 마을의 지하 방에서 5천619일 동안 매일 같은 침대에 누웠다”며 그간의 어려웠던 생활을 소개했음. 잠적 수개월 전부터 모아 놓았던 돈으로 생활했으나 곤궁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음.
- 그는 “지금까지 계산해보니 담뱃값에도 못 미치는 3.5유로(한화 약 5천400원)가 평균 하루 생활비였다”면서 “지금도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은신 기간에 집도 오스트리아인의 이름으로 얻는 등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변장하기도 했음.
- 김 씨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당장은 어렵다”면서 “0.1%, 크게 잡아 1만 명도 되지 않는 김정일 주변의 무리가 독재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그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이 길어야 5년 정도 지탱할 것으로 판단해 죽음으로 위장한 뒤 잠적했었음. 가족들도 곧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임. 김 씨는 “16년 간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처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지금 45세, 딸은 40세쯤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심경에 대해 “북한 공산당에게 붙잡힐까 봐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 壤, 16년 전 탈북 김종률 신변보호·신문 착수(3/8)

- 지난 1994년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해외근무지인 오스트리아에서 잠적했던 북한 대좌 출신 김종률 씨가 자서전 출판을 계기로 1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그의 신변보호에 착수하는 한편 그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고 김씨의 측근이 밝혔음.
- 이와 관련, 하랄트 노설 오스트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물론 우리는 이 문제의 주변상황을 정리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음. 지난 주 김씨의 출판 기자회견엔 빈주재 한국과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 관심을 나타냈음.
- 김씨는 독일 뉴스통신사인 dp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윤호진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의 외교적 직무와 개인적 특성 등을 설명하고 가까운 동료였다고 밝혔음.
- 김씨는 윤호진이 핵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틀림없이”라고 대답했음. 김씨 자신도 동독 유학 때 기계공학을 전공한 덕분에 종종 핵관련 설계도면과 기술문서들을 번역하는 일을 맡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문한 북한 고관들의 통역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직접 핵장비나 물질을 구매한 일은 없다고 말했음.
- IAEA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고위 사찰관 출신의 유스리 아부샤디 씨는 김씨의 1990년대 얼굴 사진을 보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가 “막후에서 활동”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김씨가 윤호진에 관해 값진 정보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음. 김씨의 이러한 진술들로 인해 동구에 가장 가까운 서구의 수도이자 국제기구들이 다수 상주한 빈이 북한 공작원들의 유럽 거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새삼 조명 받게 됐음.
- 실제로 오스트리아 내무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개의 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나 무역회사 직원, 태권도 사범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오스트리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오스트리아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무역상들은 김씨가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활동할 때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가짜 선적서류를 떼주거나 금수법을 우회하도록 도와주기도 했음. 김씨는 1994년 10월 18일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실은 화물기가 슬로바키아 수도에서 평양으로 떠나기 수 시간 전 이 귀국 화물기에 탑승하지 않고 잠적할 때 2만 달러를 갖고 있었으며, 거기서 기차를 타고 빈을 거쳐 미리 방을 임차해둔 린츠로 갔었다고 밝혔음.

● 정부, 러대사 초치..‘재발방지’ 촉구(3/9)

- 정부가 최근 러시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폭행 및 살인사건과 관련,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 들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정부당국자가 9일 전했다.
- 이 당국자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오늘 오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면서 “신 차관은 브누코프 대사에게 러시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말했다. 그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러시아 본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정부는 러시아 현지 공관과의 협의를 토대로 금명간 러시아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지정하고 모스크바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2단계(여행자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모스크바 국립 영화대학교(브기크) 3학년에 재학 중인 심모(29)씨가 앞서 지난 7일 오후 5시께(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남서쪽 신흥 주거지역에서 복면을 쓴 괴한에게 흉기로 찔려 인근 시립31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 수술을 받았음.



[참고 1] <원자바오 기자회견 주요 내용>(연합뉴스, 3/14)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출구전략 시행 문제와 위안화 환율, 중·미 관계 등 각종 국내외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원 총리의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요약했다.

◇ **출구전략 도입 시기** = 중국은 거시정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해 경제회복 추세를 수호할 방침이다. 우리는 통화의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공급할 것이고 금리를 합리적으로 유지해 물가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경제의 대동맥이자 올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의 관건인 농촌문제도 중시할 것이다. 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유연한 통화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어렵게 달성한 경제 회복추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만약 경제가 다시 한번 침체에 들어간다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경제 추이의 변화에 따라 대응성과 유연성을 발휘해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의 경제 상황 및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나아갈 때 나아가고 후퇴(출구전략 사용)할 때 후퇴할 것이다. 결코 실기하지는 않겠지만 (출구전략 도입시기를) 신중하고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그럼으로써 내년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는 여러분을 더 많이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과 경제 구조조정, 물가 관리 등 3가지 중점 분야를 잘 관리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더블딕’ 가능성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안화 환율 문제** = 위안화 환율이 결코 평가절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이 통계를 낸 37개 국가 중 16개국의 작년도 대중 수출이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수출이 작년 20.3%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 감소폭은 15.3%에 불과했다.

독일의 작년도 대중 수출은 760억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경우도 수출이 17%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은 0.22%밖에 줄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 유럽, 미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 되고 있다. 중국이 2005년 7월 환율 개혁을 단행한 이후 달러 대비 환율은 21% 절상됐고 실질환율로 따져도 16%가 올랐다. 또 200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위안화 환율은 실질적으로 14.5%가 절상됐다. 이 기간 중국의 무역은 16%가 줄었지만 수입은 11%밖에 줄지 않아 무역흑자가 1천20억달러 감소했다. 위안화 환율이 금융위기 기간 기본적으로



안정돼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한 나라의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가 결정하는 것이다. 환율 변동은 그 나라의 종합적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각국이 서로 비난하고 심지어 강제적인 방법으로 환율 인상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위안화 환율 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시장 수급을 기초로 현행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 **중·미 관계** = 중·미 관계는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외교관계다. 양국 관계는 양국 및 양국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멀리 내다보고 양국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관계는 양호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달라이 라마 방미를 허용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한 것이다.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중·미간 3개 공동성명은 양국관계의 기초다. 우리는 미국이 문제를 직시하고 3개 공동성명의 원칙으로 돌아가 양국관계 회복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서 우리 자산의 안전과 유동성, 가치상승을 희망한다. 미국은 국제기축통화의 발행국이다. 달러의 불안정은 우리에게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작년에도 내가 걱정이 많다고 말했는데 올해 역시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국가 신용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이것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 **자유무역 강조** = 우리는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자유무역은 경제를 물과 같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준다. 우리는 대화와 평등 협상을 통해 서로와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원한다. 자유무역은 세계경제 발전과 세계의 화해, 인류의 생활 개선을 촉진한다.

수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국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기 나라의 수출을 올리겠다고 환율을 절하하고 다른 나라의 환율을 올리려고 압력을 가하는 나라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보호무역 조치의 일종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만연하고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작년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유럽과 미국에 수차례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보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자유무역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큰 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도하 라운드 협상이다. 도하 라운드가 공정.균형의 조건에서 합리적인 무역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나는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조속히 인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이들 국가가 첨단 과학기술의 대중(對中) 수출길을 확대하는 것이 무역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은 무역규모는 크지만 50%가 가공무역이며 60%는 외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이 수출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각종 제한조치를 취한다면 여러분 본국의 기업에도 당연히 피해가 갈 것이다. 전 세계는 현재 높은 실업률, 금융 위기, 국가 재정 문제, 환율과 물가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로 일부 국가들이 세계 경제회복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더블딕으로 빠질 수도 있다.

◇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 최근 ‘중국오만론’ ‘중국강경론’ ‘중국필승론’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해 각종 비판적 이론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몇년새 급속한 발전을 했지만 도농, 지역간 불평등이 심하고 인구가 많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우리는 여전히 발전의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上海)의 발전이 중국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샤오강(小康) 목표를 실현하고 중진국 반열에 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어도 21세기 중반은 돼야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고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한다. 중국의 발전은 어떤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국은 낙후된 과거부터 현재를 포함해 영원히 패권국가를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 및 영토안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난할 때부터 단호히 대응해 왔다.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주장해 왔다. 중국이 빈곤국가에 제공하는 원조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

◇ **기후변화** = 작년 12월 17일 나는 덴마크 여왕과의 만찬 도중 갑작스런 (코펜하겐)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었다. 확인 결과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을 보내 항의했다.

왜 중국에 정식 통보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누구도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을 않고 있어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은 코펜하겐 협정 합의에 최선을 다했고 각국과 유엔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중국을 걸고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코펜하겐에서 60여 시간을 머물면서 거의 쉬지도 못한 채 독일, 영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 각국 대표단과 만났고 오바마 대통령과도 2차례 회담을 했다. 또 회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각국을 중재했고 각국의 공동노력으로 코펜



하겐 협정이 도출됐다. 이는 쉽게 얻어진 게 아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각국의 이익, 세계의 공평한 정의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공동되면서도 차별화된 책임이란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대만과의 협력** =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종합적이고 양안의 특색을 반영한 협정이다. 이는 평등협상, 호혜공영, 상대방의 입장 존중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있다. 과거에 말한 것처럼 협상 과정에서 양안간 경제규모와 시장조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대만의 중소기업과 특히 대만 농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대만에 많이 양보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형제란 말을 다시한번 하고 싶다. 협상 체결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일부 갈등이 있더라도 부모형제를 버리지는 않는다.

작년에 내가 대만에 가고 싶다고 했던 희망은 여전히 매우 강렬하다. 우리는 중화민족으로서 5천년의 역사가 있고 강한 응집력이 있다. 50년의 정치적 분단이 5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원(元)대에 황궁왕(黃公望)이란 유명한 화가가 그린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란 그림이 있다. 수백년이 지난 뒤 절반은 항저우(杭州)박물관에 나머지 절반은 대만 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나는 이 그림이 언젠가는 합쳐지길 바란다. 하물며 양안간 사람의 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홍콩이 지역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더 많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일국양제를 수호하면서 홍콩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3/05/0501000000AKR20100305088900083.HTML>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